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중심으로)

김복순*

I. 머리말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6,542천 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2.9%에 이르며, OECD 비정규직 기준에 의하면 회원국 평균의 2배 수준에 이른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2017. 10)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경제’ 실천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로드맵에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정규직 채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여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차별이 없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무늬만 정규적인 일자리를 양성하기보다는 ‘차별이 없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용형태(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른 차별과 함께 대규모·중소규모 사업체 간의 격차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OECD에서 발표한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중 근무한 지 3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22.4%라고 한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54.2%)과 상당한 차이가 나며, 두 집단 간의 이동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제약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2017년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들 내부에서 근로형태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seesaram@kli.re.kr).

OECD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는 성장을 방해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면서 넘어가야 할 과제이다.

II. 비정규직의 규모와 변화

1.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근로형태별 규모 및 변화

노동시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자리를 가지고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취업자는 2,674만 명이며, 이 중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급여, 현물 등을 받은 임금근로자는 1,98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4.4%를 차지하고 있다.¹⁾ 2017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256천 명 증가하여 2016년 315천 명 증가한 데 비해 증가폭이 둔화하였다. 임금근로자의 증가폭 둔화는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상용직(임시·일용직)의 감소와 근로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의 증가폭 둔화에 기인한 결과이다.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를 보면,²⁾ 상용직이 460천 명 증가하여 상용직 중심의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시·일용직은 전년동월대비 204천 명 감소하면서 임금근로자 증가폭 둔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임시직의 경우 2016년 고용증가로 인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고용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위험과 권한형태(ICSE-93)에 따라 분류되는 ‘종사상 지위’와는 다른 개념인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고용구조를 보면³⁾, 2017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는 654만 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2.9%(0.1%p 상승)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98천 명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2014년부터 비정규직 규모는 전년동월대비 적게는 13만 명, 많게는 20만 명 가까이 증가한 데 비해 2017년 비정규직 증가폭은 다소 둔화하였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2014년 6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5년부터는 정규직 증가속도보다 빠

1) 2017년 8월 기준임.

2)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고용원 없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며, 국제기준(ICSE-93)에 따르고 있다.

3) 2002년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에 의하면, ‘비정규 근로자는 각각의 개별적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거 파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 1〉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분포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p)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23,458	23,617	23,620	24,005	24,495	24,859	25,291	25,885	26,141	26,528	26,740 (212)
	임금근로자	15,882	16,103	16,479	17,048	17,510	17,734	18,240	18,776	19,312	19,627	19,883 (256)
	상용직	8,763	9,107	9,472	10,151	10,710	11,203	11,842	12,165	12,675	12,966	13,426 (460)
	임시직	5,044	4,970	5,117	5,122	5,031	4,935	4,862	5,104	5,106	5,196	5,029 (-167)
	일용직	2,075	2,027	1,890	1,775	1,769	1,595	1,536	1,507	1,531	1,464	1,428 (-36)
	비임금근로자	7,575	7,513	7,141	6,957	6,985	7,125	7,051	7,108	6,829	6,901	6,857 (-44)
	고용원있는자영	1,547	1,505	1,494	1,477	1,491	1,539	1,502	1,582	1,595	1,595	1,559 (-35)
	고용원없는자영	4,577	4,530	4,266	4,150	4,189	4,265	4,244	4,222	4,026	4,105	4,137 (32)
	무급가족종사자	1,451	1,478	1,381	1,331	1,305	1,322	1,304	1,305	1,208	1,201	1,160 (-41)
	임금근로자 비중	67.7	68.2	69.8	71.0	71.5	71.3	72.1	72.5	73.9	74.0	74.4 (0.4)
	상용직 비중	55.2	56.6	57.5	59.5	61.2	63.2	64.9	64.8	65.6	66.1	67.5 (1.5)
	자영업 비중	26.1	25.6	24.4	23.4	23.2	23.3	22.7	22.4	21.5	21.5	21.3 (-0.2)
근로 형태별	임금근로자	15,882	16,104	16,479	17,048	17,510	17,734	18,240	18,776	19,312	19,627	19,883 (256)
	정규직	10,180	10,658	10,725	11,362	11,515	11,823	12,295	12,699	13,041	13,183	13,341 (158)
	(증가속도)	2.9	4.7	0.6	5.9	1.3	2.7	4.0	3.3	2.7	1.1	1.2 (0.1)
	비정규직	5,703	5,445	5,754	5,685	5,995	5,911	5,946	6,077	6,271	6,444	6,542 (98)
	(증가속도)	4.5	-4.5	5.7	-1.2	5.4	-1.4	0.6	2.2	3.2	2.8	1.5 (-1.2)
비정규직 비중	35.9	33.8	34.9	33.3	34.2	33.3	32.6	32.4	32.5	32.8	32.9 (0.1)	

주: ()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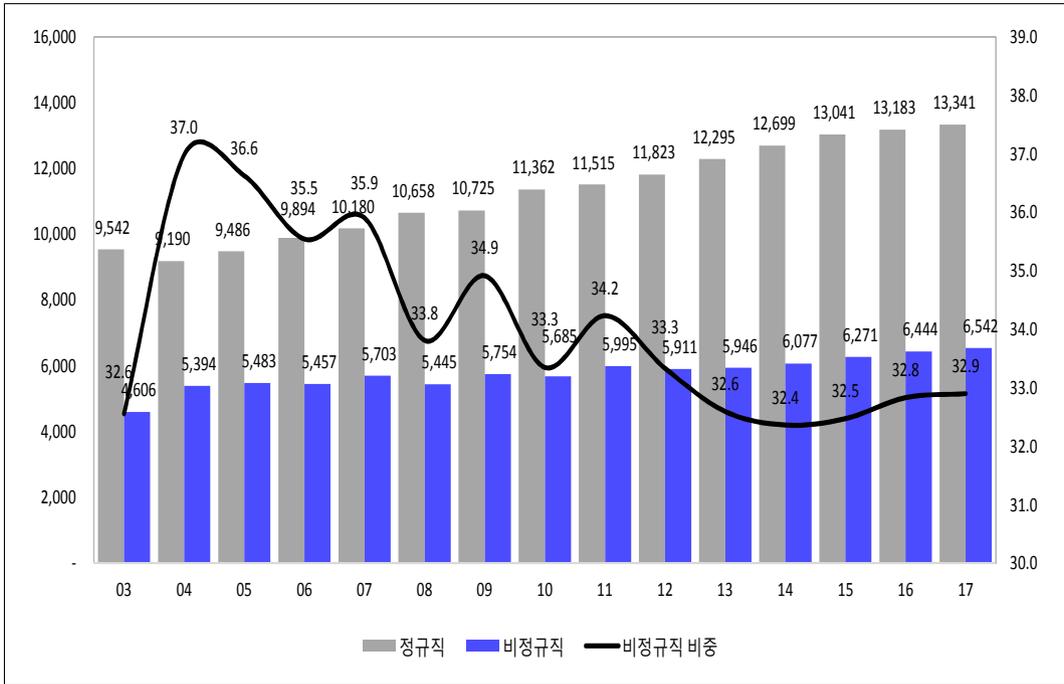
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2017년에는 정규직의 증가속도가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 증가속도는 1.2%p 하락한 영향으로 정규직·비정규직 증가속도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금융위기와 그 이후 경기회복 기간에 등락을 반복하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2014년 32.4%로 저점을 찍고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를 노동공급측면인 연령별로 보면 55세 이상 중고령층과 15~24세 청년층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2016년 1.17명보다 줄어들었으며, OECD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면서 폴란드, 포르투갈과 함께 초저출산국에 해당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자연감소와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시장의 고령화는 당연한 결과이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55세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증가는 최근 고용증가폭 둔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이들 연령층의

[그림 1] 정규직·비정규직의 규모 및 비정규직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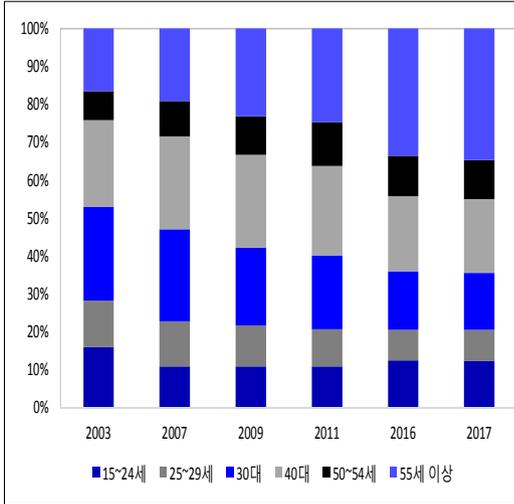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일자리 절반 이상(53.9%)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이며, 그 규모는 2,266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정년·은퇴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60~65세 연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중은 58.1%로 직전 연령층(55~59세)의 비정규직 비중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을 보면, 55세 이상 중고령층과 더불어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연령층은 노동시장 진입연령층인 15~24세 청년층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층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이들 청년층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8월 현재 13%대로 진입하였다. 15~2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들 연령층의 비정규직은 81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령층 임금근로자의 51.2%가 비정규직이며, 이 수치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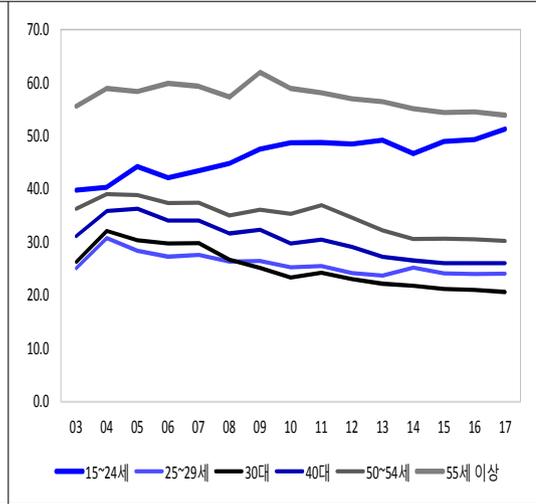
15~24세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을 졸업여부별로 나누어 보면 재학생(휴학 포함)의 83.5%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9.3%p 증가한 수치로 재학생 대부분이 학업과 병행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의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비정규직의 연령별 비중



[그림 3] 연령별 비정규직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15~24세 연령층 졸업생의 경우, 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연령층으로, 이들의 입직시 근로형태는 향후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노동시장 핵심연령층(30~40대)으로 자리매김하는지에 주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집단이다. 15~24세 졸업생의 비정규직 비중은 2016년 34.6%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며, 2017년에는 전년동월 대비 2.1%p 감소한 32.5%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고졸과 대졸 이상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반면 전문대 졸업생의 비정규직 비중은 2013년 23.7%로 저점을 찍은 후 2017년 8월 현재 31.2%로 증가하고 있음을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24세 졸업생의 비정규직 규모는 32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천 명 감소했지만, 시간제 근로는 2016년에 10만 명을 넘어섰고 2017년 8월 현재 136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비정규 근로형태 중 상대적으로 괜찮은 한시적 근로의 비중은 줄어드는 가운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시간제 근로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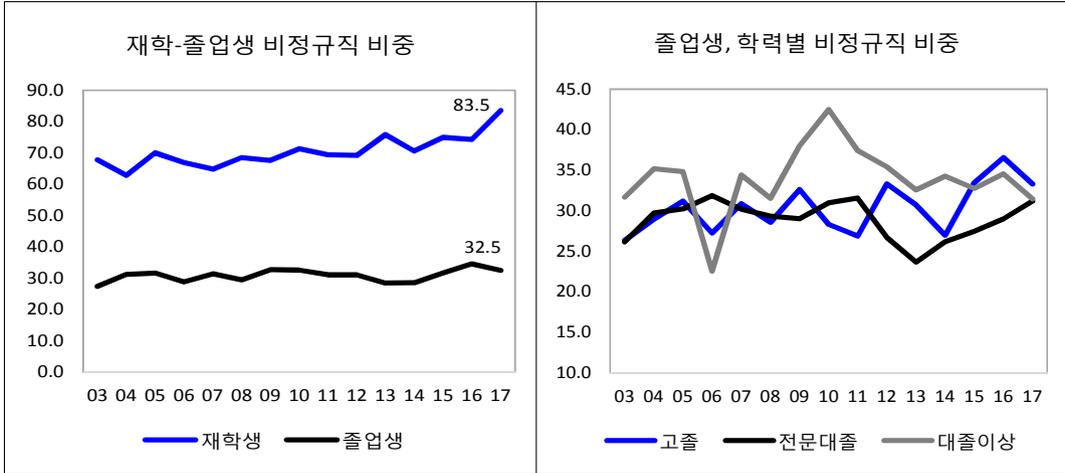
최근 청년층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진 반면 청년층 실업률 또한 높다는 것은, 일자리를 찾는 이들의 '취업으로의 진입'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를 갓 졸업하고 그나마 찾은 일자리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면 이들의 경력형성에도 그리 긍정적인 실 수는 없다.4)

한편, 노동공급측면인 성별 비정규직 특징을 보면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여전히 높

4) 15~29세 청년층 신규채용(=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5.8%로 나타났다.

[그림 4] 15~24세 졸업여부별 비정규직 비중과 졸업생의 학력별 비정규직 비중 추이

(단위 : %)



주 : 재학은 휴학을 포함, 졸업은 중퇴를 포함한 것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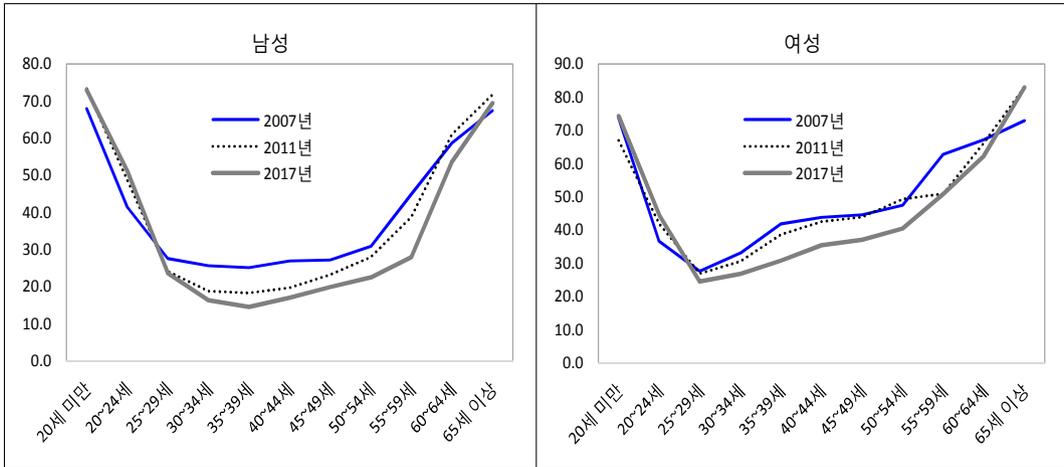
고 성별 비정규직 비중의 격차도 크다. 2017년 8월 기준 여성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74천 명 증가하여 고용률이 0.4%p 상승하면서 최근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남성취업자는 38천 명 증가에 그쳐 고용률이 0.4%p 하락하였다. 여성 임금근로자 8,782천 명 중 비정규직은 3,611천 명으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41.4%이며, 이는 남성 비정규직 비중 24.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성별 비정규직 비중 격차는 13~15% 수준으로 국제금융위기 이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에서 연령 5세 단위별로 성별 비정규직 비중을 보면, 남성의 연령별 비정규직 비중은 전형적인 U자형을 보이지만 여성의 경우 V자형에 가까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2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 비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30대부터 성별, 연령별 비정규직 비중 차이가 큰 것은 여성근로자가 결혼,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비정규직은 전년동월대비 74천 명 증가했는데 이는 2016년 148천 명 증가한 데 비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이는 55세 이상 연령층에서 비정규직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영향이 컸으며, 여성 비정규직에서 이들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33.8%에서 23.1%로 하락하였다. 이들 연령층에서 음식숙박업과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부문에서 비정규직이 감소했으며, 공공행정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여성 비정규직 증가폭이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15~29세 여성 청년층의 비정규직은 21천 명 증가하면

[그림 5] 성별, 연령별 비정규직 비중 비교(2007·2011·2017년)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여성 15~29세 청년층은 주로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 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 산업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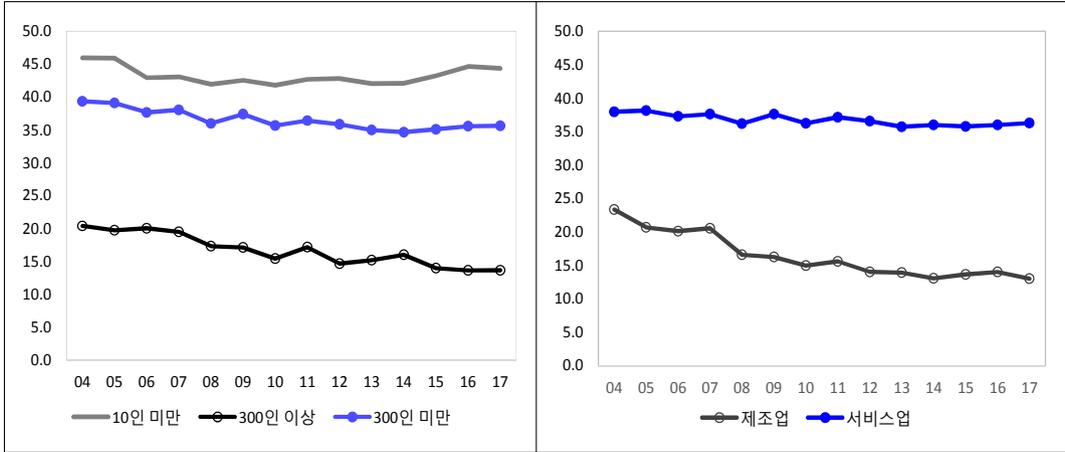
노동수요측면에서의 비정규직 변화를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비정규직 거의 대부분(94.9%)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 10명 중 5명이 비정규직으로 다른 규모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중은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고용부진을 경험했던 2009년 42.9%로 가장 낮았으며, 그 이후 2016년 48.8%까지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10인 미만 규모에서 주로 증가했던 것에 비해 2017년에는 30~99인 중규모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증가분 대부분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나 2016년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에는 비정규직이 31만 명이 증가하면서 국제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에는 2014~2016년 동안 비정규직은 매년 10만~20만 명 증가해 왔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9.8%),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53.6%), 건설업(52.0%), 음식숙박업(44.0%) 부문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서비스업 비정규직 비중은 최근 35~36%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반면 제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그림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팬텀은 일자리로 여겨지는 제조업 임금근로자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2016년에 고용이 크게 감소했으며, 고용감소에 따른 기저 등으로 2017년에는 25천 명 증가하였다. 2016년 제조업 임금근로자는 정규직 중심으로 고용감소가 컸으며, 비정규직 증가폭도

[그림 6] 사업체 규모별, 산업별 비정규직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2> 사업체 규모별, 산업별 비정규직 증감 및 비중 변화

(단위 : 천 명, %)

		2007	2011	2016	2017	2007	2011	2016	2017
		증감				비중			
비정규직 증감		246	309	173	98	35.9	34.2	32.8	32.9
규모별	300인 미만	257	270	175	94	38.0	36.4	35.6	35.6
	10인 미만	99	153	108	-3	43.1	42.7	44.6	44.3
	300인 이상	-11	40	-2	4	19.5	17.2	13.6	13.7
산업별	제조업	13	18	1	-36	20.5	15.6	14.0	13.0
	서비스업	210	293	147	113	37.6	37.1	36.0	36.2
	도소매업	36	25	-21	54	33.5	30.9	28.0	29.3
	음식숙박업	19	7	62	-16	38.9	40.2	44.2	44.0
	사업시설	122	61	37	-37	80.4	79.6	73.9	69.8
	공공행정	2	-37	-3	50	24.5	29.1	26.5	29.3
	교육서비스업	-23	18	0	39	34.4	41.1	36.3	37.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9	63	67	13	26.3	37.6	39.0	39.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둔화하면서 전년동월대비 93천 명 감소하였다. 2017년에는 제조업 임금근로자가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생산직(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7)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8), 45천 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전년동월대비 36천 명 감소하였다. 특히 이들 직종에서는 20~30대 연령층에서 36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이 차츰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고용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2017년 8월 기준 서비스업 임금근로자는 2015년, 2016년 모두 3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제조업 고용부진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 주었으나, 2017년에는 전년동월대비 21만 명 증가에 그쳤다. 특히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정규직의 고용부진(183천 명 ↑→93천 명 ↑)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비스업 부문에서 비정규직은 5,15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4천 명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소폭 둔화되었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한 36.2%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에는 도소매업(54천 명), 공공행정(50천 명), 교육서비스업(39천 명) 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한 가운데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37천 명), 음식숙박업(-16천 명) 부문에서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비정규직은 주로 청년층(15~29세)과 55세 이상 고령층, 서비스·판매직(99천 명)에서 증가한 반면 정규직은 15~24세 청년층(-64천 명)에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2. 비정규직의 근로형태별 변화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비정규직 세부 근로형태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⁵⁾ ‘고용의 지속성’에 따라 분류되는 한시적 근로, ‘노동제공방식’에 따라 분류되는 비전형 근로, ‘근로시간’에 따라 분류되는 시간제 근로이다.

2017년 8월 임금근로자 고용증가폭이 25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둔화했으며, 여기에는 비정규직의 고용둔화의 영향이 컸다. 2015·2016년 20만 명 가까이 증가했던 비정규직은 2017년 8월 98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근로형태별로 보면 파견근로, 용역근로, 일일근로 등이 포함된 비전형 근로의 감소와 시간제 근로의 둔화에 기인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와 비기간제(반복갱신, 기대불가) 근로자를 포함한 한시적 근로는 2017년 3,70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천 명 증가했으며, 임금근로자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 한시적 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조사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2009년 희망근로 등 실시로 인한 기간제 증가로 21.3%까지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18%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한시적 근로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국제금융위기 이후 14~15%대에 정체되어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을 보면,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

5)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내(재택, 가내), 일일(단기) 근로자를 포함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인 비중이 2005년 30.2%에서 2017년 6.6%로, 고용계약기간이 3년 초과인 비중도 2007년 7.5%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17년 2.7%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08년부터 집계 가능한 2년 초과 3년 이하인 기간제 근로도 조사 초기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이는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고용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보인다.⁶⁾ 반면 1개월 이상~1년 이하 근로자의 비중은 최근 80%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기간제 근로와 기대불가가 감소한 가운데 반복갱신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반복갱신(148천 명 ↑) 중 상용직이 103천 명 증가했으며,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반복갱신 상용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분포 및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비중		
				한시적근로	비전형근로	시간제근로
2003	14,149 (100.0)	9,542 (67.4)	4,606 (32.6)	3,013 (21.3)	1,678 (11.9)	929 (6.6)
2004	14,584 (100.0)	9,190 (63.0)	5,394 (37.0)	3,597 (24.7)	1,948 (13.4)	1,072 (7.3)
2005	14,968 (100.0)	9,486 (63.4)	5,483 (36.6)	3,615 (24.1)	1,907 (12.7)	1,044 (7.0)
2006	15,351 (100.0)	9,894 (64.5)	5,457 (35.5)	3,626 (23.6)	1,933 (12.6)	1,135 (7.4)
2007	15,882 (100.0)	10,180 (64.1)	5,703 (35.9)	3,546 (22.3)	2,208 (13.9)	1,201 (7.6)
2008	16,103 (100.0)	10,658 (66.2)	5,445 (33.8)	3,288 (20.4)	2,137 (13.3)	1,229 (7.6)
2009	16,479 (100.0)	10,725 (65.1)	5,754 (34.9)	3,507 (21.3)	2,283 (13.9)	1,426 (8.7)
2010	17,048 (100.0)	11,362 (66.7)	5,685 (33.3)	3,281 (19.2)	2,289 (13.4)	1,620 (9.5)
2011	17,510 (100.0)	11,515 (65.8)	5,995 (34.2)	3,442 (19.7)	2,427 (13.9)	1,702 (9.7)
2012	17,734 (100.0)	11,823 (66.7)	5,911 (33.3)	3,403 (19.2)	2,286 (12.9)	1,826 (10.3)
2013	18,240 (100.0)	12,295 (67.4)	5,946 (32.6)	3,431 (18.8)	2,215 (12.1)	1,883 (10.3)
2014	18,776 (100.0)	12,699 (67.6)	6,077 (32.4)	3,508 (18.7)	2,112 (11.2)	2,032 (10.8)
2015	19,312 (100.0)	13,041 (67.5)	6,271 (32.5)	3,638 (18.8)	2,206 (11.4)	2,236 (11.6)
2016	19,627 (100.0)	13,183 (67.2)	6,444 (32.8)	3,657 (18.6)	2,220 (11.3)	2,483 (12.6)
2017	19,883 (100.0)	13,341 (67.1)	6,542 (32.9)	3,708 (18.6)	2,092 (10.5)	2,660 (13.4)

주 : () 안은 임금근로자에서 근로형태별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300인 이상, 2008년 7월 100인 이상 200인 미만, 2009년 7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비전형 근로의 변화를 보면, 세부 근로형태(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내 근로, 일일 근로) 모두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감소한 영향으로 비전형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11% 미만으로 떨어졌다. 특수형태근로의 급격한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파견·용역 근로’인 간접고용 근로자의 규모도 873천 명으로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4.2%)이 감소하였다. 파견·용역 근로는 2005년 548천 명에서 2012년 9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으나 2014년 798천 명으로 감소했으며, 이후 80만 명대에 정체되어 있다.⁷⁾ 2017년 파견·용역근로는 전년동월대비 24천 명 감소했는데 대부분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2천 명)에 집중되어 있어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 한시적 근로와 비전형 근로의 규모와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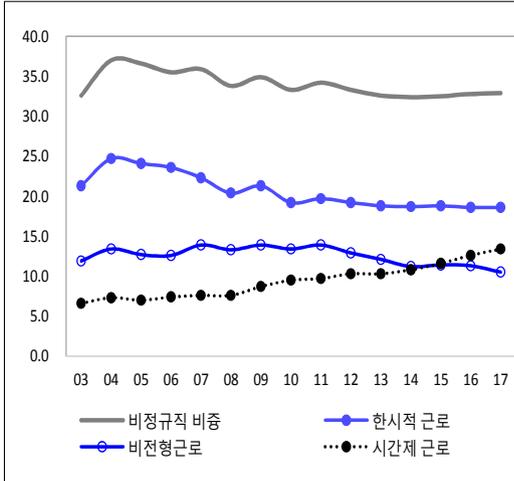
	한시적 근로					비전형근로			
	기간제	1개월 이상 ~ 1년 이하	반복경신	기대불가	파견	용역	특수형태 근로	가정내 근로	일일근로
2003	2,403 (17.0)	1,161 (48.3)	248 (1.8)	362 (2.6)	98 (0.7)	346 (2.4)	600 (4.2)	166 (1.2)	589 (4.2)
2004	2,491 (17.1)	1,326 (53.2)	580 (4.0)	526 (3.6)	117 (0.8)	413 (2.8)	711 (4.9)	171 (1.2)	666 (4.6)
2005	2,728 (18.2)	1,516 (55.6)	302 (2.0)	585 (3.9)	118 (0.8)	431 (2.9)	633 (4.2)	141 (0.9)	718 (4.8)
2006	2,722 (17.7)	1,519 (55.8)	465 (3.0)	439 (2.9)	131 (0.9)	499 (3.2)	617 (4.0)	175 (1.1)	667 (4.3)
2007	2,531 (15.9)	1,601 (63.2)	555 (3.5)	460 (2.9)	174 (1.1)	593 (3.7)	635 (4.0)	125 (0.8)	845 (5.3)
2008	2,365 (14.7)	1,589 (67.1)	374 (2.3)	549 (3.4)	139 (0.9)	641 (4.0)	595 (3.7)	65 (0.4)	818 (5.1)
2009	2,815 (17.1)	2,272 (80.7)	170 (1.0)	521 (3.2)	165 (1.0)	622 (3.8)	637 (3.9)	99 (0.6)	883 (5.4)
2010	2,494 (14.6)	2,087 (83.6)	305 (1.8)	481 (2.8)	211 (1.2)	608 (3.6)	590 (3.5)	70 (0.4)	870 (5.1)
2011	2,668 (15.2)	2,189 (82.1)	339 (1.9)	436 (2.5)	197 (1.1)	673 (3.8)	614 (3.5)	75 (0.4)	962 (5.5)
2012	2,714 (15.3)	2,209 (81.3)	289 (1.6)	400 (2.3)	214 (1.2)	682 (3.8)	545 (3.1)	69 (0.4)	871 (4.9)
2013	2,761 (15.1)	2,230 (80.7)	259 (1.4)	412 (2.3)	204 (1.1)	646 (3.5)	545 (3.0)	73 (0.4)	821 (4.5)
2014	2,749 (14.6)	2,201 (80.1)	353 (1.9)	405 (2.2)	194 (1.0)	604 (3.2)	524 (2.8)	58 (0.3)	805 (4.3)
2015	2,860 (14.8)	2,298 (80.3)	305 (1.6)	473 (2.4)	210 (1.1)	656 (3.4)	494 (2.6)	55 (0.3)	876 (4.5)
2016	2,930 (14.9)	2,304 (78.7)	317 (1.6)	410 (2.1)	201 (1.0)	696 (3.5)	494 (2.5)	42 (0.2)	863 (4.4)
2017	2,925 (14.7)	2,340 (80.0)	465 (2.3)	318 (1.6)	186 (0.9)	688 (3.5)	493 (2.5)	30 (0.1)	792 (4.0)

주: () 안은 임금근로자에서 근로형태별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7) 파견·용역 근로는 간접고용근로자를 의미하며, 고용노동부의 ‘300인 이상 고용형태공시제’에 의하면 2017년 간접고용 비율은 19.0%(902천 명)로 나타났다. 본고에서 이용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는 24천 명(대규모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1.0%)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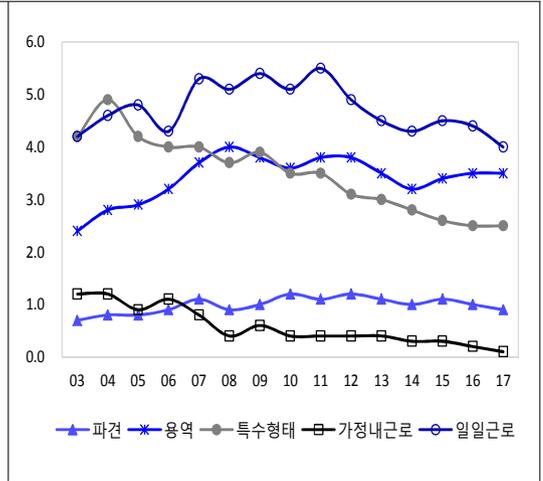
[그림 7]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비중 추이

(단위 : %)



[그림 8] 비전형 근로의 근로형태별 비중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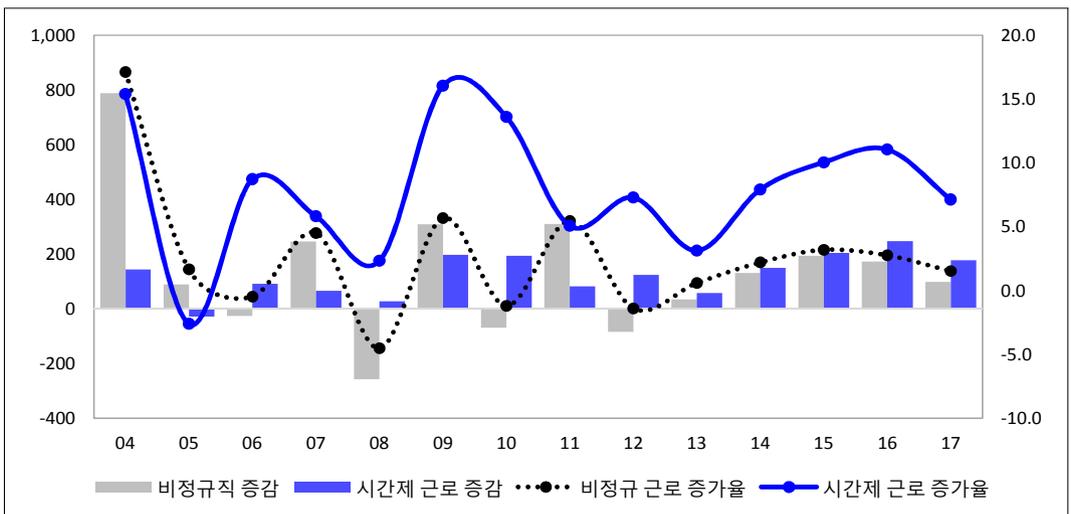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마지막으로 시간제 근로의 변화를 보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4%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비정규직의 흐름을 주도하는 근로형태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조사 초기만 하더라도 시간제 근로는 임금근로자의 6.6%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비전형 근로의 비중을 추월했고 점차 한시적 근로와의 격차도 좁혀 가고 있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증가

[그림 9] 비정규직·시간제 근로 증감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천 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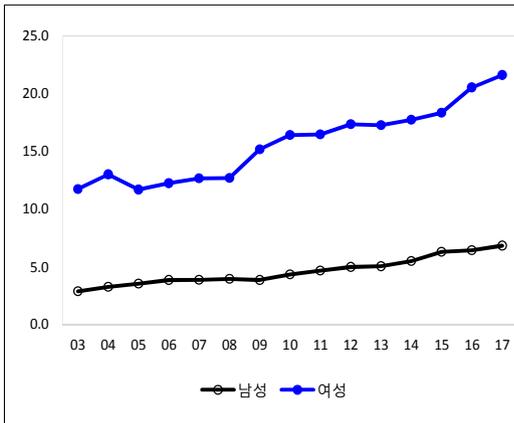
분의 대부분을 시간제 근로가 흡수하고 있으며, 시간제 근로 증가속도도 전체 비정규직 증가속도(1.5%)의 5배 정도인 7.1%를 기록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의 70% 정도가 여성근로자이며, 여성근로자의 시간제 근로 비중은 [그림 10]과 [그림 11]에서 보듯이 청년층과 55세 이상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음식숙박업(37.3%), 공공행정(31.4%), 교육서비스업(25.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4.7%) 부문에서 평균(2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7년에는 여성 시간제 근로가 2016년 224천 명 증가한 데 비해, 128천 명 증가에 그쳤으며, 주로 음식숙박업(9천 명 ↑, 2016년 51천 명 ↑)과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8천 명 ↓, 2016년 18천 명 ↑) 부문에서의 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정규직 근로형태가 서로 중복되어 계산될 수 있으며, 시간제 근로 중 다른 비정규직 근로형태와 중복되지 않는 ‘순시간제’,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의 규모는 1,314천 명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와 더불어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르며, 2017년 순시간제 일자리는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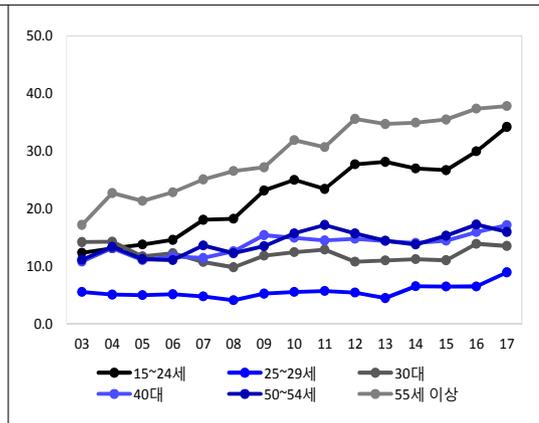
[그림 10] 성별 시간제 근로 비중 추이

(단위 : %)



[그림 11] 여성의 연령별 시간제 근로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특히 시간제 근로 중에서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685천 명(50천 명 ↑)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55세 이상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했다면, 2017년에는 15~29세 청년층(42천 명 ↑)에서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증가했으며,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초단시간 근로 및 순시간제 규모

(단위 : 천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간제	1,044	1,135	1,201	1,229	1,426	1,620	1,702	1,826	1,883	2,032	2,236	2,483	2,660
초단시간 근로	186	255	262	272	313	389	456	461	498	520	586	634	685
순시간제 근로	369 (363)	380 (372)	467 (462)	515 (505)	558 (537)	705 (681)	727 (687)	820 (763)	858 (783)	979 (891)	990 (897)	1,172 (1,039)	1,314 (1,134)

주 : () 안은 순시간제 중 임시일용직 규모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Ⅲ.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1. 비정규직의 처우 : 정규직 대비 67% 수준의 임금·사회안전망 취약

2017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3,722원이며, 정규직은 15,392원, 비정규직은 10,316원으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수준은 67.0%로 전년동월대비 개선되었지만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70%대에는 미흡한 수준이다.⁸⁾ 시간당·월평균 임금 기준 모두 비정규직의 임금상승폭이 정규직보다 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정규직 세부근로형태별로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수준을 보면, 반복갱신(81.0%), 특수형태근로(79.6%)가 정규직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대불가를 제외한 모든 비정규 세부근로형태에서 상대임금수준이 개선되었다. 상용직 중심으로 고용이 크게 증가한 반복갱신과 최근 비정규직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의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수준은 전년대비 개선되었지만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체규모별로 상대임금수준을 보면, 중소기업의 상대임금수준(대규모 사업체 임금=100)은 59.7%로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며,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체규모별·고용형태별 상대임금수준을 보면, 꽤 괜찮은 일자리인 대규모 사업체 정규직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정규직의 상대임금수준은 63.8%로 전년대비 개선되었지만 대규모 사업체의 비정규직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인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수준은 45.3%로 대규모 사업체의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고용형태뿐 아니라 사업체 규모 간 임금수준이 큰 차이를

8) 월평균임금으로 본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수준은 55.1%로 전년동월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OECD 회원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10%대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시간당 임금 기준)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23.8%(0.5%p ↑, 2017년 기준)로 4,733천 명에 이른다.9)

〈표 6〉 근로형태별 상대 시간당 임금 수준 추이(8월 기준, 정규직=1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정규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71.6	73.5	70.5	71.0	70.9	68.0	61.5	62.5	65.3	64.3	64.8	64.3	65.0	65.4	67.0
한시적 근로	70.4	75.9	72.4	74.3	76.1	72.7	64.1	66.2	69.3	69.0	69.1	67.7	66.9	68.9	69.8
기간제	70.7	75.6	74.5	74.6	76.3	75.1	65.5	65.8	69.0	69.4	69.2	67.8	67.9	69.6	69.6
반복갱신	88.4	96.3	89.1	94.0	98.1	88.4	87.2	100.8	93.7	86.5	96.0	85.8	79.3	78.7	81.0
기대불가	55.8	54.7	54.1	51.3	48.0	51.6	48.7	46.4	52.4	54.2	50.9	51.6	53.3	56.1	54.9
비전형 근로	66.3	66.0	63.2	60.1	60.1	59.4	57.0	57.4	58.5	58.7	58.3	60.8	60.3	61.2	64.0
파견	68.0	78.0	76.1	66.3	70.8	71.3	69.7	64.5	66.5	73.4	62.8	60.8	65.9	67.4	70.4
용역	49.4	50.0	48.4	46.1	48.4	49.1	47.9	50.3	49.8	48.9	52.0	51.8	53.0	54.7	55.2
특수형태근로	82.9	86.1	83.2	81.4	79.9	79.7	75.4	77.1	82.4	78.4	76.1	84.0	79.1	78.2	79.6
가정 내 근로	36.4	43.1	47.8	42.9	34.9	36.4	37.1	31.3	34.9	41.6	33.3	27.8	43.1	43.4	46.2
일일근로	63.2	55.2	53.7	51.5	52.0	51.2	47.6	49.0	47.4	50.1	51.5	54.4	54.5	55.4	60.5
시간제 근로	85.1	80.2	76.7	73.1	66.6	64.7	56.2	55.5	59.3	53.3	55.5	54.0	57.8	59.1	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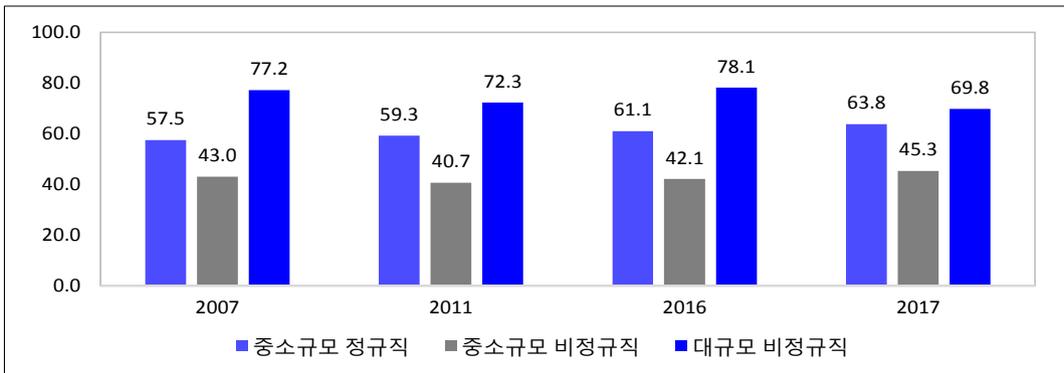
주 : 1) 시간당 임금 = 월평균 임금 / (평소 1주당 근로시간 * 30.4/7).

2)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근로형태별 상대임금 수준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 12〉 중소기업 정규직·중소규모 비정규직·대규모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수준
(대규모 사업체 정규직 기준, 2017년 8월)

(단위 : %)



주 : 시간당 임금 기준이며, 대규모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9) 저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위임금(시간당 임금 기준)의 2/3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조사 초기부터 26~27%대에서 정체되어 있었으나 2015년 21.4%까지 감소했다가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중 절반 정도, 특히 시간제 근로의 10명 중 6명이 저임금근로자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6.6%로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중 저임금근로자는 43.5%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제 근로 증가분 대부분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흡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사업체 시간제 근로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61.3%에 이른다.

근로형태별 상대임금수준 차이 이외에 654만 명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환경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보험가입률을 보면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전년대비 개선되었지만 정규직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그림 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규직의 국민연금가입률,

〈표 7〉 저임금근로자 비중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임금 근로자	전 체	27.5	26.3	26.8	25.8	27.4	26.8	26.2	26.3	26.7	25.7	24.7	24.1	21.4	23.3	23.8
	비정규직	42.1	37.5	39.3	38.3	40.2	40.6	42.7	42.3	43.3	43.1	42.7	42.0	38.6	41.3	42.3
	시간제	48.4	44.0	46.9	43.4	49.6	53.2	55.3	56.4	58.0	62.7	62.0	62.5	58.1	57.9	61.0
중소 규모	전 체	30.5	29.2	30.0	28.7	30.4	29.8	29.0	29.1	29.5	28.6	27.5	27.0	24.0	26.1	26.6
	비정규직	43.3	39.2	41.2	40.0	42.0	42.2	43.9	43.5	44.8	44.3	44.2	43.7	39.7	42.8	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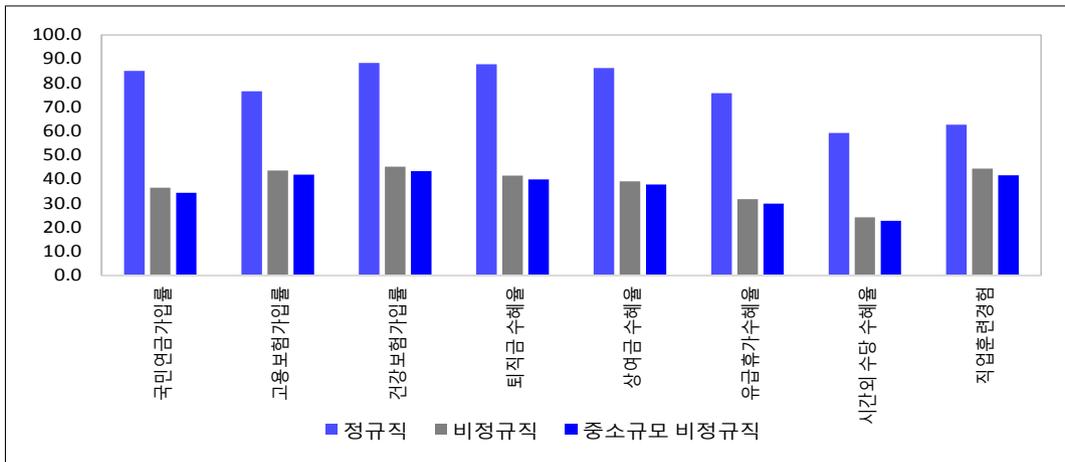
주 : 저임금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이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함.

시간당 임금 = 월평균임금/(평소 1주당 근로시간*30.4)/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 13〉 정규직·비정규직·중소규모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및 복지수준(2017년 8월)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8〉 비정규직의 산업별 사회보험가입률과 각종 복지 수혜율(2017년)

(단위 : %)

	국민연금 가입률	고용보험 가입률	건강보험 가입률	퇴직금 수혜율	상여금 수혜율	유급휴가 수혜율	시간외 수당 수혜율	직업훈련 경험
전산업	36.5 (85.0)	43.6 (76.6)	45.3 (88.4)	41.5 (87.8)	39.1 (86.2)	31.7 (75.7)	24.2 (59.2)	44.4 (62.6)
제조업	61.1	68.7	70.6	66.5	61.8	57.4	53.8	44.3
전기·가스·수도사업	72.0	84.0	84.0	60.0	58.4	56.8	28.8	67.2
하수·폐기물·환경복원업	69.7	67.8	73.0	60.2	66.4	46.9	32.2	38.4
건설업	14.4	22.9	16.0	15.5	16.1	9.5	12.1	22.8
도매 및 소매업	32.2	35.6	33.9	31.2	35.1	24.3	22.1	33.3
운수업	43.7	59.2	61.7	56.2	47.9	41.7	41.8	45.0
숙박 및 음식점업	19.5	23.7	20.9	20.1	21.4	13.2	18.0	16.8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	73.6	75.7	74.8	69.9	63.2	59.8	38.3	47.2
금융 및 보험업	24.5	27.5	27.1	23.2	34.4	20.9	11.6	83.5
부동산 및 임대업	35.5	47.2	53.8	57.9	55.2	36.2	13.7	43.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1.1	76.7	80.3	71.7	67.9	65.9	33.3	50.6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45.8	63.6	77.9	73.3	59.1	51.6	33.4	48.6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	30.2	37.5	41.3	24.9	27.2	28.4	18.2	83.3
교육서비스업	39.8	36.3	41.8	38.7	38.4	33.0	22.3	52.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0.8	59.2	58.9	54.0	41.7	34.6	22.9	66.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24.6	32.6	32.2	21.8	25.2	21.5	17.4	36.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22.6	26.2	25.5	27.5	36.1	22.3	13.4	33.6

주 : 1) 고용보험가입률의 경우 통계청은 2010년부터 고용보험 비가입대상인 공무원, 교사, 별정우체국 직원을 분모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고용보험 비가입대상 근로자도 분모에 포함하여 계산함.

2) () 안은 각 항목별 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과 수혜율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7년 8월.

고용보험가입률, 건강보험가입률은 각각 85.0%, 76.6%, 88.4%인 반면 비정규직은 각각 36.5%, 43.6%, 45.3%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회안전망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사업체 특성별 비정규직의 사회보험가입률과 각종 복지제도를 보면,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등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사업체 정규직의 국민연금가입률과 건강보험가입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사회보험가입률은 30~40%대에 머물러 있어,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불안정하여 노동이동

이 잦고 실업위험이 높은 비정규직이 ‘실업’을 겪는 동안 ‘사회안전망’이라는 울타리가 제기능을 하기에는 역부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7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는 3,091천 명으로 임금근로자의 15.5%에 해당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21.8%,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22.3%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취약계층과 더불어 법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있으나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¹⁰⁾

〈표 9〉 임금근로자·비정규직·중소규모비정규직의 고용보험 사각지대(2017년 8월)

(단위: 천 명, %)

	근로자수				비 중		
	근로자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미가입	고용보험 적용제외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미가입	고용보험 적용제외
임금근로자	19,883	13,066	3,726	3,091	65.7	18.7(22.2)	15.5
비정규직	6,542	2,850	2,266	1,426	43.6	34.6(44.3)	21.8
중소규모 비정규직	6,206	2,601	2,222	1,383	41.9	35.8(46.1)	22.3

주: () 안은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7년 8월.

한편,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상당히 길다. 2017년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0.9시간으로 전년대비 변동은 없지만 비정규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전형 근로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파견·용역·특수형태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늘었으며, 제조업의 파견, 용역 근로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각각 44.5시간, 45.9시간으로 정규직 43.5시간, 비정규직 39.4시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지속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30.2개월로 정규직의 90.1개월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6개월 미만 단기근속자가 41.6%로 나타나 정규직의 8.8%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중은 정규직의 경우 28.1%인 반면 비정규직은 6.6%에 불과해 노동이동이 잦은 현실을 엿볼 수 있었다. 비정규 근로형태별로 보면 특수형태근로, 반복갱신, 파견, 용역, 기간제 순으로 평균 근속기간이 길며, 시간제 근로도 2017년 처음으로 20개월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의 평균 근속기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6개월 미만 단기근속자가 50.0%나 차지하고 있어 고용이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비정규 근로형태가 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0) 고용보험 사각지대(고용보험 적용제외) 규모는 공무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5인 미만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65세 이상, 주당 평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1개월 미만 근속한 일용근로자는 제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것이다.

〈표 10〉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임금근로자	48.5	47.8	47.5	46.6	45.9	45.1	43.9	43.4	42.7	42.0	41.7	41.5	41.4	40.9	40.9
정규직	50.2	49.7	49.2	48.5	47.9	46.9	45.9	45.6	45.0	44.2	44.0	43.8	44.0	43.7	43.9
비정규직	45.0	44.7	44.5	43.1	42.5	41.7	40.1	39.1	38.4	37.7	37.1	36.7	35.9	35.2	34.8
한시적 근로	46.8	46.4	46.5	45.2	44.9	44.3	42.3	41.5	40.7	40.2	39.5	39.0	38.7	37.5	37.3
기간제	46.2	45.1	45.6	44.3	44.1	43.8	41.5	40.7	39.8	39.3	38.7	38.1	37.9	36.9	36.7
반복갱신	49.3	49.6	50.9	47.8	47.1	45.2	45.3	43.2	43.5	44.2	43.2	42.8	42.6	41.9	42.0
기대불가	49.3	49.1	48.4	48.2	46.6	45.8	45.4	44.5	43.8	43.4	42.2	41.8	40.7	38.4	36.3
비전형 근로	46.6	45.8	45.9	44.7	44.1	44.1	42.7	42.6	41.9	41.7	41.1	41.0	39.8	40.0	40.3
파견	49.1	48.0	48.2	47.6	46.0	44.2	41.3	43.6	42.8	39.1	39.3	40.7	37.5	39.1	39.3
용역	54.1	52.9	52.2	51.9	51.0	49.6	49.0	47.2	46.6	47.0	45.5	45.2	44.7	43.5	43.8
특수형태근로	45.2	44.8	44.6	41.0	41.3	41.6	40.8	40.8	39.4	39.8	39.9	40.6	39.5	39.3	40.2
가정 내 근로	39.2	37.1	37.4	38.0	35.8	30.5	32.9	33.4	31.9	33.2	32.1	36.0	32.1	30.1	27.8
일일근로	43.9	42.8	43.0	42.0	40.9	41.7	39.9	40.7	40.4	39.7	39.1	38.4	37.1	37.7	37.8
시간제 근로	23.0	22.6	22.2	21.5	21.7	21.5	21.3	21.1	20.7	21.0	21.2	21.0	20.7	20.8	20.8

주 : 평소 1주 근로시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11〉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추이

(단위 : 개월)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임금근로자	52.7	52.9	54.3	54.1	55.2	57.1	58.6	59.4	61.2	64.0	66.8	67.3	68.0	69.0	70.4
정규직	68.3	69.8	71.8	70.1	71.3	73.9	78.7	77.3	79.2	82.2	84.8	85.3	87.3	88.6	90.1
비정규직	20.5	24.1	23.9	25.1	26.3	24.3	21.2	23.6	26.5	27.7	29.6	29.6	27.8	29.0	30.2
한시적 근로	21.7	25.9	25.8	28.4	31.5	28.9	23.2	26.9	30.7	31.4	32.7	31.4	29.2	30.4	31.4
기간제	19.1	22.6	25.0	25.0	29.2	28.1	23.2	25.6	28.7	29.9	31.0	29.1	28.6	28.9	28.7
반복갱신	54.2	50.5	56.4	61.4	57.2	52.5	46.7	59.7	62.1	57.9	67.9	62.3	50.5	57.0	58.4
기대불가	16.2	14.7	13.6	13.9	13.5	16.1	15.6	12.8	18.0	22.2	21.8	19.8	18.9	20.9	16.4
비전형 근로	18.7	21.9	21.6	20.0	20.3	20.8	20.7	23.3	24.3	26.3	29.2	30.8	28.7	29.8	32.6
파견	24.9	26.7	28.5	24.0	25.1	29.0	25.5	30.0	35.1	33.0	34.2	30.5	30.8	34.6	39.7
용역	23.8	22.8	24.7	23.6	25.7	23.9	25.3	30.3	29.1	30.9	34.3	34.5	32.9	34.1	34.5
특수형태근로	31.0	37.1	38.5	32.9	35.2	39.8	39.7	45.1	49.2	54.2	60.7	69.0	64.6	69.3	73.1
가정 내 근로	11.5	16.5	13.6	14.0	15.9	10.5	12.2	14.2	11.2	16.4	23.5	26.0	39.7	17.2	26.5
일일근로	1.6	2.1	2.3	2.8	2.3	2.1	1.7	1.4	1.7	2.0	1.4	1.0	1.5	0.7	0.8
시간제 근로	10.4	11.5	10.7	12.3	11.4	11.8	12.0	13.4	15.9	17.2	18.8	18.2	18.9	19.8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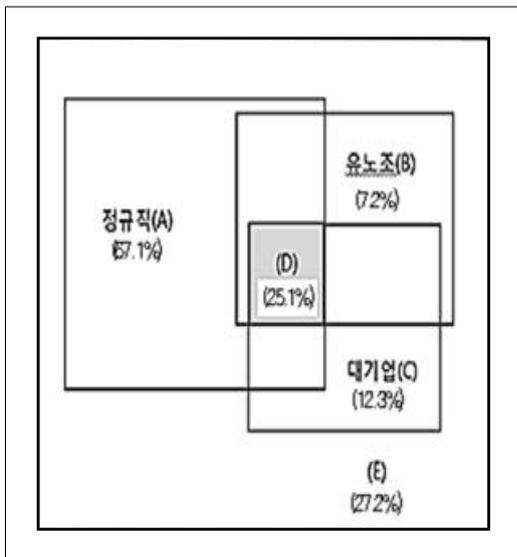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IV. 노동시장 이중구조

앞에서 상대임금수준, 사회보험가입률, 복지수준을 사업체 규모별, 근로형태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양호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가진 1차 노동시장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가진 2차 노동시장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꽤 괜찮은 일자리인 ‘대규모·유노조·정규직(D집단)’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인 ‘중소규모·무노조·비정규직(E집단)’의 임금, 고용안정성, 고용지속성, 복지수준 등을 비교하면 [그림 14], <표 12>와 같다. E집단의 상대임금수준만 보더라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근속연수도 상당히 짧고 각종 사회보험과 복지수준도 현격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 노동시장 구조



[표 12] 대기업·유노조·정규직(D) vs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E) 부문별 차이

(단위: 천 명, 만 원, 원, 년, %)

		D	E
근로자수		1,435	5,408
월평균임금		397	142
시간당임금		22,277	9,482
근속연수		13.6	2.3
사회 보험	국민연금가입률	98.8	31.0
	고용보험가입률	77.5	38.6
	건강보험가입률	99.5	39.8
복지 수준	퇴직금지급률	99.7	36.9
	상여금지급률	97.2	35.2
	시간외수당지급률	89.0	19.9
	교육훈련여부	99.4	37.5

주: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7년 8월.

이렇듯 노동시장이 양분되어 있는 데다 이들 집단 간의 이동도 상당히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서 발표한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

라 비정규직 중 근무한 지 3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22.4%로 OECD 회원국 평균(54.2%)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비정규직’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정규·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격차까지 중첩된 이중구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노동시장 현실에 입각하여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장치를 확대하고 더불어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것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654만 명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32.9%가 비정규직이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고용의 지속성마저 확보되지 않은 비정규직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이들의 임금이나 사회보험 등 근로조건 면에서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으며, 나아가 이들의 정규직으로의 이동도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본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 비정규직에서의 변화는 첫째,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으며, 특히 노동시장 진입연령층인 청년층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코세대(1979~1992년생)의 노동시장 진입과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높은 경제활동의지는 비정규직 관련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층의 비정규직 입직은 그들의 경력형성, 나아가 그들이 노동시장 핵심연령층이 되었을 때의 미래 모습에도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청년층의 나은 일자리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대적으로 열악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로 비정규직 비중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의 증가분 대부분을 중소기업에서 흡수하면서 비정규직의 94.9%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대규모 사업체 = 13.7%)이다. 근로조건이 대규모 사업체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업체로의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과 근로조건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비정규직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의 증가이다.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자발적 사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59.7%이며 사회보험가입률과 복지제도는 10~20%대 수준으로 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비정규직 다른 근로형태인 한시적·비전형 근로에 비해서도 열악한 수준인 시간제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넷째, 비정규직의 임금수준, 사회보험가입률, 복지제도는 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며, 사업체 규모별, 고용형태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에 따른 고용형태와 대규모 사업체이나 아니냐에 따른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격차가 서로 중첩되어 있으며, 집단 간 격차 또한 현격하다는 점이다.

본고의 결과를 통해 어렵사리 취업을 해도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으로의 취업이 괜찮은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향후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와 이들을 위한 고용·사회안전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나아가 두꺼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에 활용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프레카리아트(Precariat: 저임금·저숙련 노동에 시달리는 불안정 노동 계급)의 부피줄이기, 프레카리아트와의 격차줄이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김복순(2017),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노동리뷰』 2017년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93~112.
- 김주영 외(2009), 『한국의 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원.
- OECD(2013),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